

- 하지만 13년 뒤에는 베이비부머가 전기 고령자 그룹을 형성하고, 현재의 고령자가 후기 고령자 그룹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매우 유사함.
-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고령화대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관련 법 및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,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, 지속가능한 복지정책과 고령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

■ 첫째,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부에서 고령화대책 전반을 관장하는 일본과 같이 고령화대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필요

- 일본의 경우 내각부 주도로 이미 1995년 고령화사회대책 기본법 등을 마련하고 공적연금제도 등을 수립 · 개편
 - * 고령화대책 관련 주요부서는 후생노동성이나,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및 재무장관 등 경제관련 장관이 조정역할과 지도력을 발휘
 - *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총리(의장), 부총리 겸 재무장관(부의장), 그 외 4명의 경제관련 장관, 일본은행총재,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
- 우리나라의 경우 총리실을 주도로 국무총리가 수반이 되고 경제부총리가 실무책임을 맡는 고령화대책 컨트롤타워를 수립
 - * 컨트롤타워는 일본과 같은 前 · 後期고령자, 보이지 않는 가족, 老老케어 등에 걸맞는 고령화대책을 총괄적으로 마련하고 동 정책과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과제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

■ 둘째, 공적연금제도를 충실화하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

- 일본과 같이 공적연금에 의존한 ‘연금라이프’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나, 4대 공적연금 개선을 통해 빈곤하거나 장애가 있는 고령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제고